

노후 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서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정의당’은 노인 빈곤해소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 (1) 2016년 현재 46%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 또는 근로자평균임금 약 2.5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 (2)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 (4) 중소기업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군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5. 그밖에 국민의 노후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에 대해 일상적인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6. 국민 노후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에 대해 노력하는 정의당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상의 6대 사항을 당의 주요 정책입장 및 과제로 채택하고,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정의당과 국민행동과의 상호협력과 연대,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2016년 3월 23일

